

백두산 부근 지도의 경계 표시 현황과 기원 탐색*

안중욱** · 김명정***

The Status of Demarcation Line on Baekdusan Area's Maps and its Historical Origins*

Chong Uk Ahn** · Myung-Jung Kim***

요약 : 백두산 부근의 경계 획정 문제는 1712년 처음 가시화된 이후 300여 년이 지났으며, 현재도 미세하게나마 다른 유형의 지도들이 병존한다. 지금까지 대다수의 학생용 교과서들은 천지를 포함한 백두산 정상부가 우리 영토에 속한다는 의식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간도협약(1909)과 조·중 변계 조약(1962) 등도 정계비 건립 이후 백두산 부근의 경계 표시와 깊은 관련을 가진 사건들이다. 특히 '반국가 단체'인 '북한'이 중국과 맺은 조·중 변계 조약은 일부 지도의 천지 동쪽 경계선 표시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며, 일상에서도 관련 내용을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다. 국가의 경계와 관련해서는 '공인'된 명확한 정리나 지침이 있어야 하며, 필요할 경우 이를 지속적으로 모색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와 함께 왜 현재와 같은 상황이 나타나게 되었는지를 탐구해보는 것도 교수·학습 면에서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주요어 : 백두산 부근의 경계 획정, 영토, 교과서, 지도, 조·중 변계 조약

Abstract : The lining of Baekdusan area's demarcation has been seemingly remained unsolved for 300 years when the issues were on the table in 1712. There are still slightly different versions of maps on the border. A majority of Geography textbooks helped Korea students realize that the mountain peak of Baekdusan belonged to Korean territory. The two historical events, the *Gando Convention* (1909) and the *Treaty between North Korea and China on the Demarcation of the Korean-Chinese National Border* (1962), were deeply involved in the demarcation of Baekdusan area. In particular, the latter treaty between 'the North Korea' as 'an anti-state organization' and China seemed to contribute to the demarcation of the Cheonji's east area in some maps, which in turn influenced the contemporary maps. It is natural that there should be official guidelines or regulations on the national border. It is also necessary to investigate the proper demarcation lines on maps and relevant guidelines. Finally, it is meaningful to examine what historical factors had influenced the current demarcation situation.

Key Words : The lining of Baekdusan area's demarcation, Territory, Textbook, Map, *Treaty between North Korea and China on the Demarcation of the Korean-Chinese National Border*

*본 논문은 한국지리학회(2012년 12월)와 한국사회과교육연구학회(2015년 6월)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연구 주제 및 내용을 재구성 과 수정·보완을 통해 발전시킨 것입니다. 재구성의 중점은 두 발표에서 학술적 의미와 연관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두었음을 밝힙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부연구위원(Associate Research Fellow, Korea Institute for Curriculum and Evaluation, ahncu@kice.re.kr)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부연구위원(Associate Research Fellow, Korea Institute for Curriculum and Evaluation, a1862@kice.re.kr)

I. 머리말

‘영토교육’을 어떻게 정의하든지 ‘영토교육’이 해당 국가 ‘영토’의 공간적 범위나 지리정보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최근 ‘영토와 관련된 교육과정, 교과서 내용 등에 대한 교육적·사회적 담론의 활성화는 독도, 동해는 물론, 센카쿠, 시사, 난사, 쿠릴¹⁾ 등 우리 주변국들의 영토 경계 지역에 대한 관심과 쟁점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²⁾ 구체적으로는 동아시아 각국의 해상 영토를 포함한 영토 범위, 영토의 한계선과 직·간접적인 관련이 있으며, 그 곳이 어떤 나라의 언어로(또는 어떤 나라에서 명명한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지도 중요한 쟁점이다.³⁾

따라서, 지리교육을 포함한 관련 교육계에서 교과용 도서를 편찬할 때, 이의 표시 및 표기에 많은 고민을 할 수 밖에는 없다. 교과서나 부도(附圖)의 작은 지도에 표시한 국가 간 경계선의 위치, 분쟁 지역의 지명 표기 방식 등이 외교적 마찰의 출발점이 될 수 있으며, 특정 국가와 다양한 형태의 갈등 상황에 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교과용 지도 제작자들을 더욱 곤란스럽게 만드는 것은 ‘분단’이라는 우리나라만의 특별한 상황이다. 앞서 제시한 사례나 상황은 적어도 영토의 대부분을 달리하는 ‘국가’ 간에 일어나거나 겪을 수 있는 것이지만, 북한 지역과 다른 나라와의 경계에 대해서는 언급이나 기술 자체가 쉽지 않다. 현재, 우리와 북한은 국제연합(UN)에도 각각 가입되어 있으며, 다른 나라에서는 남·북한을 하나의 국가로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남·북한은 상대방이 ‘점유’하고 있는 물리적 공간을 미수복 영토로 간주하고 있으며, 1992년 ‘남북기본 합의서’에서도 남·북한은 서로를 국가로 승인하지 않고 있다(김명기, 2011:117). 따라서, 우리 입장에서는 북한이 행한 외교적, 행정적, 정치적 조치 등을 원칙적으로 인정할 수 없는 입장이다. 예를 들어, 북한이 행한 행정 구역 개편이나 새롭게 정한 지명 등이 그러한데, 일부 현실적인 이유 등으로 이를 활용하거나 적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교육적 측면에서는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다.⁴⁾

북한 지역 내 행정 구역 개편이나 지명 관련 사례들이 어떤 기준을 적용할지에 대한 선택의 차원이라면, 헌법상 대한민국의 영토인 북한 지역과 다른 국가들 간의 경계선과 관련해서는 실질적인 기준의 존재 여부가 문제가 된다. 구체적으로는 “국경선을 획정할 수 있을 만큼

적용 가능한 분명한 기준이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이 보다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압록강과 두만강이라는 비교적 명확한 경계선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애매한 지역이 존재하며, 특히 백두산 부근과 두만강 중·상류 일대는 간도 문제 등과 더불어 매우 복잡한 양상을 보이는 지역으로, 오랫동안 국가 간 경계선(線)보다는 ‘면(面)’적인 개념이 특히 강했던 ‘변경’ 지역이었다고 할 수 있다(그림 1).

이 지역에 대해서는 조선조 후반부터 일제강점기 직전까지 백두산 정계비 설치(1712), 감계 회의(1885, 1887), 간도 협약(1909) 등으로 경계선을 분명하게 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 볼 때, 터무니없이 불리한 조약이라는 평가를 받는 간도 협약(1909) 이후 한반도와 중국 간 경계에 대한 조약은 중국과 ‘반국가 단체’인 북한 정권이 맺은 소위 ‘조·중 변계 조약(1962)’ 밖에는 없다. 따라서,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이 이와 같은 협약이나 조약들을 인정할 수 없었던 것이 원칙적으로는 당연하다. 결국, 지금까지는 적어도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는 명확한 기준이나 합의가 부재한 상황에서 지도나 교과용 도서 등에 백두산 부근의 경계선이 그려졌다고 볼 수 있다.

현재의 정치적 상황이 계속 유지될지 또는 급변할지에 대한 판단은 쉽지 않지만, 적어도 교과용 도서에 대해서는 기준이나 표현 방식 대한 논의가 시작될 필요는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위한 출발점으로 지도 표기의 현재 상황을 살펴보고, 이와 같은 표현이 어떻게 나타나게 되었는지를 정계비 건립, 일제강점기 이후 교과서 및 교사용 참고 도서, 관련 조약 중 특히 조·중 변계조약을 중심으로 찾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지도 제작 등에서 우리가 간과했거나 애써 무시했던 것들의 의미가 무엇 인지를 생각해보고, 무엇보다도 향후 교과용 도서 편찬 시 백두산 천지 및 그 주변 지역의 경계 표현 방식에 대한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II. 백두산 부근 경계 표시 현황

애국가 1절에서도 등장하는 백두산의 경우 우리 국민이라면 당연히 우리나라의 영토에 포함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특히 ‘천지’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두산에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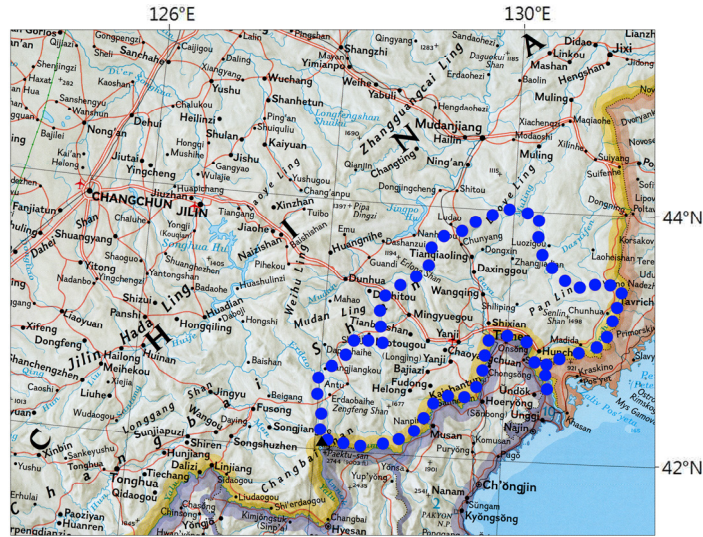


그림 1. 백두산 및 간도 일대

- * National Geographic Society(2015:91)의 지도를 본 연구에 적합하도록 가공한 것임.
- ** 간도의 범위에 대해서는 여러 이견이 존재하며, 일반적으로 서간도는 압록강과 송화강의 상류 지방을, 동간도(북간도)는 두만강 북쪽 지역을 가리킴. 보통 간도라고 하면 동간도를 말함(인터넷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간도”, 2017년 8월 14일 검색).
- *** 지도상에 ●●●로 표시된 지역은 동간도의 위치와 범위를 짐작할 수 있도록 과거 만주국(1932~1945)의 행정 구역 중 하나인 간도성(間島省: 1934년에 설치)을 표시한 것임. 현재 중국 길림성의 옌변 조선족 자치주와 유사한 위치이며, 면적은 약한 작음(위키백과, “젠다오 성”; “옌변 조선족 자치주”, 2017년 8월 14일 검색).

녀은 사람들은 누구나 알고 있겠지만, 중국을 통해 천지까지 올라가야 하며, 백두산 정상부나 천지 등에 대한 언론 기사 등에서도 ‘중국 쪽 백두산 봉우리’ 등의 표현을 쉽게 접할 수 있다. 머리로 백두산 천지와 정상부 칼데라 외륜산의 모든 봉우리가 우리 땅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실제로는 중국이 백두산 정상부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부지불식간에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일상에서 이와 같은 불일치는 별다른 문제가 없지만, 교과용 도서 편찬, 특히 국가 간 영토 경계선을 명확하게 표시해야 하는 지도는 다른 문제이다. 영토와 관련된 국가 간 분쟁이나 갈등을 촉발 및 증폭시키는 대표적인 매체가 관련국가의 교과서와 지도라는 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의 경계는 명확한 근거에 기반하여 통일된 방식으

로 그려질 필요가 있다. 만약 근거가 분명하지 않거나, 다양한 버전이 공존한다면, 현 시점에서는 외교적 문제를, 미래 시점에서는 역사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현안 발생 시 우리나라에 그다지 유리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무엇보다도 교육적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학생들에게 어디까지가 우리나라의 영역인가에 대해 아무도 말해주지 못한다면, 애국심 고양이나 자긍심 고취 등에 있어 국가의 역할이나 책무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국토지리정보원의 서로 다른 두 지도 그림 2, 3⁵⁾을 통해 파악할 수 있듯이 백두산 부근의 경계선은 천지 전체가 우리 것이라는 것 이외에 국경선, 특히 천지 주변 및 백두산 동측의 경계선에서 차이가 나타난다. 부연하자



그림 2. 「대한민국 지세도(1:250,000, “회령(NK 52-5)” 도엽 중 백두산 부근

출처 : 국토해양부 국토지리정보원,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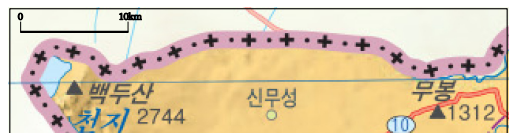


그림 3. “대한민국전도”(1:1,200,000) 중 백두산 부근 확대 지도

출처 :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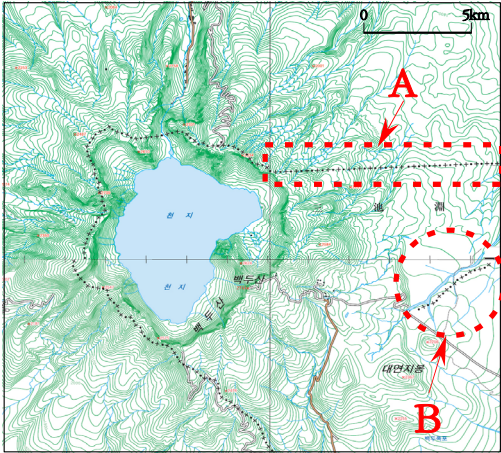


그림 4. 「북한지도집」의 백두산 부근

출처 :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2013.

* 「북한지도집」(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2013)의 “백두산(1:50,000, 2008년 인쇄)” 도엽과 “소백산(1:50,000, 2008년 인쇄)” 도엽의 일부를 결합하여 작성함.

만, 천지 바로 동측에서 경계선이 직선으로 그어져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남쪽으로 약간 만곡하는지가 가장 큰 차이라고 볼 수 있다. 국토지리정보원에서 2013년에 발간한 「북한지도집」에 포함된 2개의 서로 다른 도엽은 이와 관련한 실상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그림 4의 천지를 가로지르는 검은 선을 경계로 위는 백두산 도엽이고 아래는 소백산 도엽인데 A와 B 모두 국경선 표시를 확인할 수 있다. 물론, B의 국경선 표시는 중간에 단절되어 있지만, 지도와 함께 제시되어 있는 위성사진에서는 국경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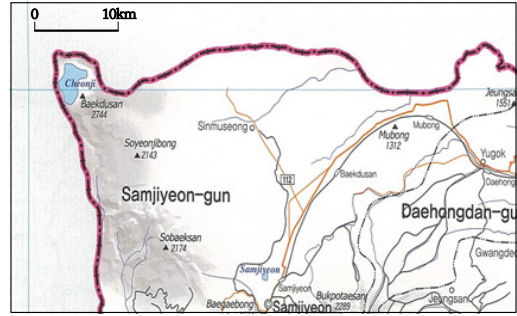


그림 5. The National Atlas of KOREA, “BAEKDUSAN (1:500,000)” 중의 백두산 부근

출처 : National Geographic Information Institute, 2009.

위쪽에 ‘중국’ 아래쪽에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명을 확인할 수 있다(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2013:556) 비록 서로 다른 도엽이지만, 동일한 지도집에서 2개 유형의 국경 표시 유형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즉, 그림 2는 A 유형, 그림 3은 B 유형이라고 할 수 있으며, B 유형은 국토지리정보원의 The National Atlas of KOREA(영문판 국가지도집)에 포함된 지도인 그림 5에서도 확인할 가능하다.

국토지리정보원 지도들에 나타나는 차이들은 시판되는 다른 지도들에도 반영되는데, 교육용 지도들도 예외일 수는 없다. 그리 오래전인 아닌 2000년대 들어서 사용되었던 부도에서도 그림 6과 같은 서로 다른 유형의 지도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림 6의 왼쪽 지도와 오른쪽 지도는 2군데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데, 첫째, 비룡폭포(장백폭포)의 포함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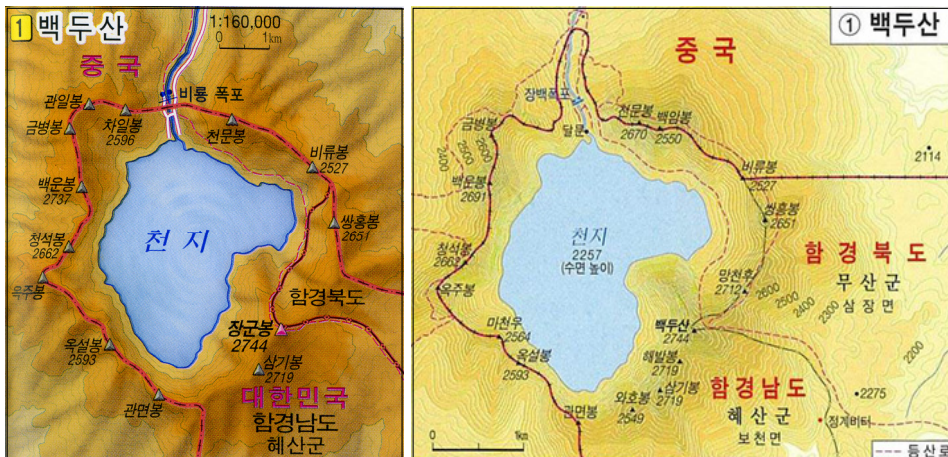


그림 6. 부도(附圖)상의 백두산 천지 주변 및 동쪽 경계 표시 유형

출처 : 최성길 등, 2011:41(좌); 박선미 등, 2010:16(우).



그림 7. 천지와 정계비터의 위치

출처 : 인터넷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천지”, 2017년 8월 14일 검색

와 둘째, 앞서 국토지리정보원 지도를 사례로도 언급했듯이 천지북동쪽에서 중국과의 국경선 방향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지도 발행을 담당하는 특정 정부기관이나 교과용 도서 출판사를 비판이나 비난하려는 의도로 위와 같은 사례를 제시한 것은 아니며, 선부른 결론은 오히려 문제를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부연하자면, 일정 수준 이상의 국력을 갖고 있는 동시에 특수한 안보 상황에도 처해 있는 우리나라와 같은 국가에서, 적지 않은 기간 동안 이러한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은 단언하기 쉽지 않은 이유나 과정들이 보이지 않게 누적되어 있기 때문일 것으로 판단된다. 후속 장부터는 가능한 범위에서 이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III. 백두산 정계비와 천지의 귀속

언제부터인지 그 시점을 명확하게 언급할 수는 없지만, ‘백두산 정계비=간도 문제의 시작’이라는 식의 관점은 거의 공식화되어 있으며, 백두산 정계비를 다루고 있는 대부분의 연구들은 ‘간도’가 되찾아야 할 우리 영토라는 점에 집중하고 있다.⁶⁾ 이는 백두산 정계비의 비문 중 조선과 청의 경계를 나타내는 ‘서위압록 동위토문(西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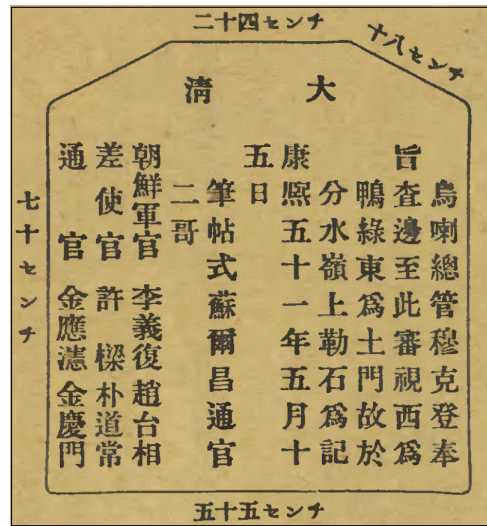


그림 8. 정계비 비문

출처 : 조선총독부, 1938:9.

鴨綠 東爲土門)이라는 문구와 관련되는데, 여기서 ‘토문(土門)’이라는 하천이 송화강(松花江: 송화강)의 지류이므로 ‘간도’가 되찾아야 할 우리 영토라는 것이 해당 연구들의 주요 내용이다.

이와는 차별적으로, 강석화(1997)의 연구처럼 적어도 정계 당시인 1712년 즈음에는 조선 조정은 물론 청 측에서도 토문강과 두만강을 같은 것으로 이해하였으나, 이후 북방 영토에 대한 관심 증대·변경 지역 개발·조선인 이주 등으로 인해 토문강이 송화강의 지류라는 사실이 확인되고 널리 알려지면서 간도 문제가 나타났다고 보는 주장도 존재한다.

문제는 전술한 어느 관점이라도 거의 모든 연구의 중심은 ‘간도’라고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정계비가 자리하고 있는 ‘백두산’ 자체, 부연하자면 정상부의 봉우리들과 ‘천지’의 귀속 여부에 대해서는 상세한 기술이나 주장을 찾기가 어려우며, 정계비나 토문강의 위치, 간도와 관련된 논의를 전개하는 과정에서 간단하게 ‘천지’라는 명칭만 언급되고 있을 뿐이다.⁷⁾

이러한 일반적인 연구 경향과는 달리 이강원(2007)은 정계비, 목책, 토문강(두만강) 등의 위치를 고려할 때, 백두산 천지가 조선의 영토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술하고 있다(이강원, 2007:99-102). 그의 주장에 따르면 토문강이 송화강의 지류이건 두만

강의 지류이건 간에 백두산 천지는 우리 소속이 아니며,⁸⁾ 천지에서 두만강이 시작된다는 잘못된 전제와 현지 지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의 정계비 위치 선정이 문제의 발단이다.

……정계비는 천지 한가운데나 백두산 정상에 세웠어야 옳다. 그러나 그는 천지의 물이 지하로 흘러 ‘중천(中泉)’이 되고, 이 물이 분류(分流)하여 압록강과 토문강(두만강)으로 들어간다고 보아, 그 지점에 정계비를 세웠다. 압록강—백두산 천지—두만강이 연결되어 있다는 고래의 관념에 충실한 행동이었다. 그 결과 **백두산과 천지가 청에 속하여** 논란을 일으키게 되었다. (이강원, 2007:101-102)

이형석(1991) 또한 백두산 정계비의 위치와 비문을 근거로 “실로 어이없게도 백두산 천지는 우리 국경 밖에 위치하게 되었다(이형석, 1991:88).”고 기술하고 있다. 또한, 해당 문헌은 당시에는 아직 확실하게는 알려지지 않았던 조·중 변계조약의 내용 일부를 소개하고 있으며, 당시 중국 측의 지도를 통해 조·중 변계조약에 따른 중국과의 천지 분할 상황을 추정한 결과 북한 쪽의 면적이 더 넓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이형석, 1991:91-92).⁹⁾ 아울러, 조약 내용 및 해당 조약의 체결과 관련한 북한의 역할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술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백두산 정계비는 국경선 표석(티)으로서 가치를 상실하고 역사의 한 유적터로 남게 되었다. 실로 백두산 정계비가 세워진 지 260여 년 만에 천지의 반쪽이나마 되찾아 우리의 땅으로 표기되어졌다. (이형석, 1991:91)

이형석 연구의 특이점 중 하나는 교과용 도서의 천지 부근 지도를 논의 전개에 활용하고 있다는 점인데, 특히 남한의 교과용 도서에 실린 천지 부근 지도는 많은 오류가 발견된다는 주장을 일부 사례들과 함께 제시하고 있다(이형석, 1991:94).

정계비 뿐 아니라 조선 후기의 북방 지역의 개발 및 영토 의식 확대와 연계하여 간도문제를 바라보고 있는 강석화(1997)는 백두산 정계비의 위치가 갖고 있는 한계를 아쉬워하는 박래겸의 「북막일기(北幕日記)」¹⁰⁾ 일부

를 소개하고 있다.

……목극등이 드디어 비를 세워 정계하였다. 이때 이후로 분수령 이북과 백두산 대택(白頭山 大澤)이 역시 호지(胡地)로 들어가게 되었으며 우리나라는 앉아서 선춘령을 잃었으니 탄식을 금할 수 없다(원문: ……穆胡遂立碑定界而去 從此以後 分水嶺以北 白頭大澤亦入於胡地 而我國坐失先春嶺矣 可勝歎哉). (강석화, 1997:129)

강석화는 19세기에 들어서면서 북방 영토에 대한 관심이 깊어졌다는 주장의 사례로 이와 같은 글을 제시하고 있다. 인용 글에 대해 “정계 당시의 실제 사정과 전혀 다르다(강석화, 1997:130).”고 평하고 있지만, 이는 생략 부분에 소개되어 있는 조선과 청의 관리들의 정계 당시 모습에 대한 언급이라고 판단된다. 정계비 건립 이후 분수령(정계비를 세운 곳) 이북과 대택(大澤: 천지)이 호지(胡地: 청)에 속하게 되었다는 부분은 정계 이후의 국경 상황에 대한 내용으로 볼 수 있다.

이종석(2010; 2014)은 조·중 변계 조약의 배경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당시 회담에 임하는 백두산 정계비에 대한 중국 정부의 기본적 입장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조선과 청나라가 세웠으며 간도 협약 때도 경계 획정의 기준점이 된 백두산 정계비를 기준으로 국경을 정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는 백두산 정계비가 천지 동남단의 백두산 기슭에 있기 때문에 천지 전체가 중국 소유라는 뜻이다. (이종석, 2010:93; 2014:21)

1712년에 정계비를 처음 세울 때, 지금까지 우리가 확신하거나 파악하지 못한 어떤 유리한 맥락에서 위치가 결정되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종석의 글은 백두산 정상부(천지를 둘러싼 외륜산) 및 천지의 소유권 결정에 있어서, 정계비(티) 위치가 갖고 있는 물리적 속성이 적어도 이점(利點)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첫째, 백두산 천지 및 정상부 경계의 혼란상은 간도 협약(1909) 훨씬 전인 1712년에 세워진 정계비의 위치와 비문 내용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으며,¹¹⁾ 둘째, 정계비의 위치 및 비문 내용 기준으로 할 때, 간도 영유권을 주장할 수는 있어도 백두산 정상부

및 천지의 귀속 여부에 관해 우리에게 유리한 측면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정계비의 위치가 갖는 불리함은 약 200년 후 간도 협약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¹²⁾ 공인 또는 법적 유효성 관련 문제와는 별개로, 간도 협약 체결 이후 상당 기간 동안 천지를 포함한 백두산 정상부가 적어도 문서상으로는 중국(당시 청)에 귀속되는 상황을 초래했다. 다만, 이와 같은 사실이 간도 영유권 문제가 갖는 중요성에 밀려서 크게 쟁점화 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IV. 교과용 도서상의 백두산 천지

간도 협약 이후, 천지의 절반 정도가 북한 측 영역에 포함된 조·중 변계조약의 내용이 남측에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한 1970년 전후 시기까지를 어렵잡으면, 대략 60년 정도가 된다. 그 기간 동안 국제법적 효력이 심각하게 의문시되는 조약 문서상이 아닌 실질적으로 백두산 천지가 어디에 속했는지, 나아가 '어디에 속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본 장에서는 학교 교육 그리고 교과서보다 사람들의 생각이나 시선을 동일하게 만들 수 있는 홍보 및 전달 효과가 큰 매체를 찾기는 쉽지 않다는 판단 하에, 주로 교과서를 활용해 이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였으며, 일제강점기의 경우는 내용의 보완을 위해 교사용 참고 도서도 함께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는 간도협약 직후인 1910년대부터 조·중 변계 조약으로 인한 천지 분할설이 조금씩 알려진 1970년대까지의 교과서를 주요 대상으로 하였으며,¹³⁾ 이후 시기의 교과서들은 참고 수준으로 활용하였다. 자료 구득의 어려움으로 학교급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는 제약이 있었지만 경향성 파악이 가능한 수준으로 분석 대상을 선정하였다.¹⁴⁾

1. 일제강점기¹⁵⁾

일제강점기 초기인 1914년 조선총독부에서 발행한 고등보통학교¹⁶⁾ 교과서인 「일본지리교과서」의 조선지방 총설에서는 첫째, 장백산맥이 만주와의 경계를 이루며, 둘째, 그 주봉이 백두산이고, 셋째, 백두산의 높이는 8천 9백 척(尺)으로 반도(조선) 제1의 높은 산이라는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조선총독부, 1914:58).¹⁷⁾ 또한, 부록의 '본방저명산악(本邦著名山岳)'에서도 백두산을 조선지방

유일의 저명한 산으로 나타내고 있다(조선총독부, 1914: 부록10). 일반적으로 산 높이는 가장 높은 봉우리를 기준으로 하는데 이를 '조선지방' 단원에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는 점, 굳이 백두산을 조선의 명산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 등을 통해 백두산을 조선 영역 내 산으로 보려 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나마 확인할 수 있다.¹⁸⁾ 다만, 천지에 대한 언급은 찾을 수가 없다.

국정지리교과서¹⁹⁾의 교사용 참고도서로 1919년에 國定教科書共同販賣所에서 발간한 「新定尋常小學地理教授書(卷二)」²⁰⁾는 백두산의 귀속과 관련해서 다소 모순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제8단원인 '조선지방'의 제1과 '위치·면적·지세'에서는 "... (조선의) 북쪽 변경에 우뚝 솟은 백두산은 본주(本州: 일본 열도) 굴지의 높은 봉우리인 온타케(御嶽)나 노리쿠라다케(乘鞍岳) 등에 거의 필적하는 조선 제1의 고봉(高峯)이자 대륙에서 보기 드문 화산이다(國定教科書共同販賣所, 1919:325)."와 같이 기술하고 있으며, 제5과인 '조선지방개괄'에서는 '지세' 부분을 수형도 형태로 정리하면서 '백두산'과 '장백산맥'을 대표적인 산맥과 산악으로 제시하고 있다(그림 9). 그리고, 랴오둥 반도와 만주 일부 지역을 다루고 있는 제9단원 관동주부만주(關東州附滿洲) 단원에서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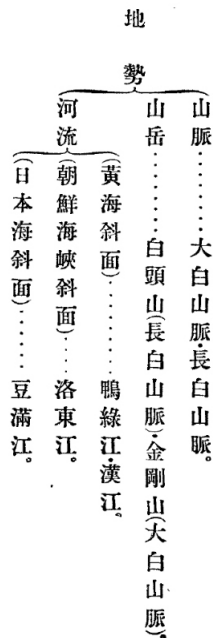


그림 9. 조선의 지세

출처 : 國定教科書共同販賣所, 1919:380.

湖 の 頂 山 頭 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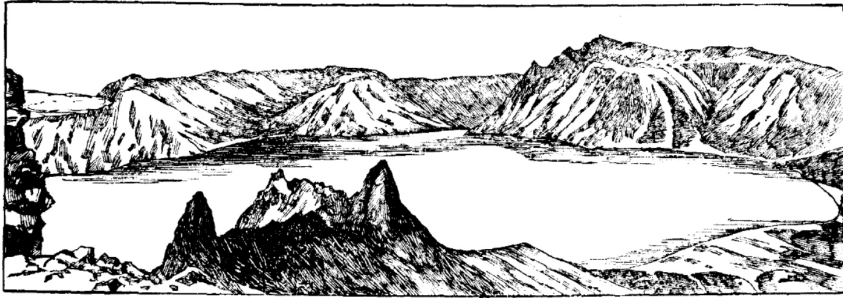


그림 10. 천지 삽화

출처 : 조선총독부, 1932:6.

‘장백산맥’은 언급되지만, ‘백두산’이라는 지명은 나타나지 않아서, 독자들이 백두산을 우리나라 영역에 속하는 산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는 달리, 제8단원 제1과 뒷부분에 포함된 ‘참고’의 ‘조선의 지세’ 부분에서는 “...백두산은 조선과 만주의 경계상에 솟아있는데, 대부분이 만주에 속하고 조선의 지세와는 그다지 관계가 없다(國定教科書共同販賣所, 1919:332).”는 서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서 앞서 제시한 사례와는 정합하지 않는다. 제8단원이 ‘조선지방’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모순적인 기술이 더욱 부각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천지는 앞서의 교과용 도서들과 마찬가지로 언급되지 않았다.

1920년에 발행된 「심상소학지리서보충교재교수참고서」는 앞서 기술한 「新定尋常小學地理教授書(卷二)」와 마찬가지로 심상소학교에서 사용되는 지리교과서²¹⁾를 기반으로 편찬된 교사용 참고 도서이다. 두 책의 발행 시기는 큰 차이가 없지만, 「심상소학지리서보충교재교수참고서」는 동경이 아닌 경성의 조선총독부에서 편찬하였으며, 소위 ‘대일본제국’의 개관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제외한 200쪽 정도가 조선에 대한 내용이다. 따라서, 백두산과 관련하여 「新定尋常小學地理教授書(卷二)」에서는 언급되지 않았던 내용도 나타난다. 대표적으로 천지에 대한 기술이 있으며(조선총독부, 1920a:104)²²⁾, 백두산을 조선 5산 중 하나로 소개하고 있다(조선총독부, 1920a:16).²³⁾ 정계비에 대한 내용도 확인 가능한데, 다만, “중국과의 경계는 백두산의 정상에서 약간 동남쪽 아래이며, 이곳에 오래된 정계비가 있다(조선총독부, 1920a:10).”는 문장을 통해 백두산 정상부가 중국에 귀

속되어 있다는 표현을 간접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1922년 제2차 조선교육령으로 보통학교의 기본적인 수업 연한이 일본과 조선 거주 일본인들이 다니던 ‘심상소학교’와 같은 6년제가 되었다. 그 직후인 1923년에 조선총독부에서 편찬한 「보통학교지리보충교재교수참고서」는 백두산에 대해서 앞서 심상소학교용으로 1920년에 조선총독부에서 편찬한 「심상소학지리서보충교재교수참고서」와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당시 우리나라에 거주하던 일본인뿐 아니라 우리 민족도 백두산 정상부가 중국 쪽에 귀속되어 있다는 상황을 어느 정도 수준에서는 인지하기 시작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보통학교지리보충교재교수참고서」를 참고해서 가르쳐야 하는 교과서인 「보통학교지리보충교재: 아동용」²⁴⁾에서는 ‘만주와의 경계에 솟아있는 조선에서 가장 높은 산’이라는 일반적인 내용과 백두산의 높이, 정상에 호수가 있다는 내용만 기술되어 있을 뿐(조선총독부, 1923a:10), 정계비, 국경선의 위치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언급은 없다.

1930년대 초 만주사변(1931)과 만주국 건설(1932) 직후 1932년에 조선총독부가 발행한 교과서인 「초등지리서(권1)」 또한 백두산에 대한 서술 내용이 이전의 보충교재류 교과서들과 유사하다. 다만, 그림 10과 같은 삽화를 ‘북부조선’ 단원의 시작부에 제시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한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삽화는 해당 교과서 내에 정계비나 국경선의 위치 등에 대한 별도의 기술이 없는 상황에서, 백두산 정상부뿐 아니라 산 전체가 우리에게 귀속되어 있다는 인식을 갖게 할 수 있다. 부연하자면, 해방 이후까지도 백두산 관련 내용을 다룰 때 천지 삽화 또는 사진이 제시되는 것을 거의 대부

분의 교과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교과서 서술이나 편찬 방향에 당시의 실제 상황은 그다지 큰 영향을 주지는 못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1년 뒤인 1933년에 발행된 「초등지리서(권2)」의 ‘만주국’ 단원에 백두산의 귀속과 관련한 의미 있는 기술이 없다는 점에서도 이를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학생용 교과서와는 달리 교사용 참고 도서들 중 일부는 백두산 정상부가 중국 측에 귀속되어 있음이 분명하게 기술하고 있다. 예를 들어, 鈴木駿太郎(1935)의 「初等地理書附圖解説(上卷)」에서는 “백두산은 보통 조선의 최고봉이라고 불리고 있지만, 실제로 정상부는 만주 측에 있다.”와 “관모봉이 (조)선내 제일 높은 봉우리이며~”라는 진술을 확인할 수 있다(鈴木駿太郎, 1935: 26).²⁵⁾ 이와 유사한 내용은 大石運平(1935)의 「初等地理書」挿畫取扱の實際」에서도 나타나는데, 앞서 인용한 삽화인 ‘白頭山頂の湖’에 대한 해설 및 참고 등의 형식으로 기술되어 있다(大石運平, 1935:62-65). 다만, 「初等地理書附圖解説(上卷)」과는 약간 차이를 보이는데, “백두산 주봉인 소위 ‘大正峰(대정봉: 현재 백두산 최고봉)’은 ‘조선’ 제1의 높은 산이라고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과는 달리 ‘우리나라(당시 일본)’의 판도 내에는 없다. 즉, 일본과 만주의 경계는 대정봉 남동쪽 아래 약 4km 거리에 있는 정계비를 기점으로 동쪽으로 흐르는 석류수를 따르게 된다. 따라서, 백두산을 ‘조선반도’ 제1의 높은 산이라고 한다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大石運平, 1935:64)”는 식의 다소 괴변에 가까운 논리를 포함하고 있다.

1937년에 개정된 「초등지리(권1)」 교과서의 경우 백두산에 대해서는 1932년 판과 큰 차이는 없다. 다만, 앞서 제시한 천지의 삽화 제목이 ‘白頭山頂の湖’에서 ‘白頭山頂の湖(天池)’로 수정되었는데(조선총독부, 1937:6), 그동안 용왕담 등과 함께 사용되던 호수 명칭이 적어도 학생들이 사용하는 교과서에서는 ‘천지’로 정해진 것으로 보인다. 이듬해인 1938년 조선총독부가 직접 발행한 이 교과서의 교사용인 「교사용 초등지리(권1)」에서는 정계비 형태의 삽화를 통해 비문의 실제 문구를 제시하고 있으며(그림 7), 앞서 제시한 1930년대 교사용 참고 도서들과 마찬가지로 백두산 정상이 조선의 영역에 속하지 않는다고 기술하고 있다(조선총독부, 1938:9, 11). 특이한 점은 앞서의 「(初等地理書)挿畫取扱の實際」와 유사한 방식의 논리를 전개하고 있는데, 이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정상에서 중턱까지를 덮고 있는 화산재의 색이 흰색인 까닭에 백두산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으며

로, 백두산 최고봉인 대정봉만이 백두산인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백두산이 만주국과의 경계라고 가르치는 것은 문제가 없다(조선총독부, 1938:9).”와 같다. 또한, 이 교사용 도서는 원래 천지의 화구벽에 세워졌어야 할 정계비가 목극 등의 억압으로 현 위치에 세워졌다는 내용(조선총독부, 1938:10)도 포함하고 있다.

이후 1943년까지 개정이 이루어진 「초등지리」 교과서²⁶⁾의 백두산 관련 내용은 1937년 판과 큰 차이가 없으며, 제4차 조선교육령 공포(1943년) 이후 1944년에 발간된 「초등지리 제오학년」과 「초등지리 제육학년」에서도 마찬가지다. 다만, 「초등지리 제오학년」에서 백두산 천지 삽화가 사진으로 교체되었다(조선총독부, 1944a:103).

정리하자면 일제강점기 우리나라에서 사용되었던 교과서 및 이를 교수하는데 활용할 목적으로 편찬한 참고용 도서에서 백두산이 우리나라와 중국(만주) 사이의 경계를 이루고 있는 산으로 기술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학생용 교과서와 교사용 참고 도서 간, 발간 시기 등에 따라 어느 정도 간극이 존재 하는데, 특히 1930년대 이후 학생용 교과서에 실린 천지 관련 삽화(또는 사진)와 교사용 지도서에서 확인 가능한 백두산 천지 및 정상부의 만주(중국) 귀속 기술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교사용 참고 도서의 해당 진술에 대해 부연되어 있는 어색한 논리는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이와 같은 간극을 상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2 해방 이후

해방 이후 교과서를 우리 손으로 편찬하게 된 이후에도, 적어도 학생용 교과서에서의 백두산 관련한 기술은 일제강점기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즉, ‘첫째, 중국과의 국경지대에 솟아있고, 둘째,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산으로 압록강, 두만강 등이 시작되며, 셋째, 화산 활동으로 형성되었다.’ 등이 학생용 교과서에서 확인 가능한 백두산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백두산 천지에 대한 삽화나 사진, 설명 또한 대부분의 초·중등 교과서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다만, 일부 교과서에서 단군 신화나 간도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은 일제강점기와는 차별적인 모습이다. 예를 들어, 1948년에 문교부가 발행한 「(사회생활과 4학년 소용)우리나라의 생활(1)」은 백두산에 대한 내용 기술을 천지 삽화로 시작하며, 국경 근처 장백산맥에 제일 높이 솟아 있는 우리나라

라에서 가장 높은 산이라는 내용, 화산 활동에 대한 내용 등 일제강점기 초등교과서의 주요 내용이 이어진 후, 마지막 부분에 단군에 대한 언급이 나타난다(문교부, 1948:15-17). 그리고, 이와 같은 관점은 6.25전쟁 이후 1950년대 중반의 초등학교 교과서 내용에서도 이어진다.²⁷⁾

교수요목기에서 제1차 교육과정기까지, 중등 교육에서 우리나라 지지(地誌)는 중학교 수준에서 이루어졌다. 중등 지리교과서는 초등 사회과 교과서와는 달리 검정 심사를 통과하면 학교 현장 적용이 가능한 관계로 출판사에 따라 백두산에 대한 내용 서술에 차이가 나타난다. 예를 들어, 1949년 발행 및 검정 심사를 통과한 노도양의 「우리 나라(지리 부분)」에서는 「관북 지방」에 대한 지 지 단원에서 백두산에 대해 비교적 상세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앞서 초등학교 교과서의 내용을 보다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정계비문을 삽화로 제시하면서 정계 이후 「토문강」에 대한 해석 문제를 소개하고 있다. 또한, 1909년 만주 철도 이권을 위해 일제가 국경 문제를 희생해서 「오늘과 같은 국경」²⁸⁾이 되었다는 기술도 나타난다(노도양, 1949:18-20). 제1차 교육과정기 교과서 중 저자와 발행처가 같은 「우리 나라 지리」의 백두산 관련 내용도 천지 그림이 사진으로 변경된 것을 제외하면 문장 수준까지 거의 동일하다(노도양, 1957:156-158).

남북된²⁹⁾ 지리학자인 정갑이 저술한 중등 교과서인 「우리 나라 생활」의 경우도 백두산과 관련해서 앞서 제시한 노도양의 교과서와 유사한 내용 요소를 다루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분량이 적고 포함된 천지 사진(정갑, 1949:48; 1950:48)이 작다. 무엇보다도 “1909년에 이르러~두만강 상류의 한 지류인 석을수(石乙水=돌물)를 국경선으로 확정하였다(정갑, 1949:83; 1950:83).”는 진술을 통해 간도협약 관련 내용을 안타까움이나 아쉬움 없이 소개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노도양의 교과서와 차이를 보인다. 다만, 관북 지방 단원의 마지막 부분에 포함된 「설문」의 19개 질문 중 3개에서 백두산 및 국경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점은 특이하다(정갑, 1949:84; 1950:84).³⁰⁾

제1차 교육과정기 중등 교과서인 안송산·박관섭(1957)의 「우리 나라 지리」는 앞서 제시한 동일 교육과정기 노도양(1957)의 교과서와는 차별적으로 정계비의 위치에 따른 백두산 정상부와 천지의 중국 귀속 여부를 “~좌우간 현재 사회산인 백두산과 천지는 만주에 있는 셈이다.”와 같이 명확하게 기술하고 있으며, 당시 교과



그림 11. 정계비 위치 삽화 및 관련 교과서 기술

출처 : 안송산·박관섭, 1957:146.

사에서 많이 사용되던 천지 삽화나 사진이 아닌 정계비가 세워진 주변 지역을 나타낸 삽화를 제시하고 있다(안송산·박관섭, 1957:146). 해방 이후 우리 정부가 발행 또는 검·인정한 우리의 교과서 중에서 간도 이외의 백두산 정상부 귀속에 대해 이처럼 분명하게 기술하고 있는 것은 찾기 어렵다. 저자들은 이와 같은 현실에 대해 매우 안타까워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며, 관련 내용은 그림 11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와는 달리 백두산에 대한 내용이 아주 적은 경우도 나타나는데, 박노식(1961)의 「우리 나라 지리」는 백두산 천지 삽화(박노식, 1961:5)와 3줄에 못 미치는 매우 간략한 내용(순상화산, 산정 화구에 천지, 우리 민족의 영산 등)만이 제시되어 있으며(박노식, 1961:114), 강대현·주재중(1963)의 「우리 나라 지리」에서는 천지 사진(강대현·주재중, 1963:178) 이외에는 관련 진술을 거의 찾을 수 없다. 교과서 명에서 차이가 있지만, 「우리 나라 지리」와 마찬가지로 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과서인 이지호(1960)의 「한국지리」도 마찬가지다.

이와 같은 경향은 제2차 교육과정에서도 확인되는데, 문교부에서 1972년³¹⁾에 발행한 초등학교 4학년 2학기 「사회 4-2」 교과서의 「국경지대」 소단원에는 천지 사진(문교부, 1972:42)과 함께 「백두산으로부터 흘러내리는 압록강과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중국 및 소련 땅과 맞붙어 있다(문교부, 1972:40).」,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산으로, 그 높이가 2744m(문교부, 1972:42)」 등이 내용의

전부이다. 지리 영역으로 구성된 중학교 1학년 대상의 사회 과목 검정 교과서들도 화산에 대한 내용 정도가 추가되어 있을 뿐 실질적 내용에서는 초등 교과서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³²⁾ 무엇보다도 백두산 정상부의 귀속 여부에 대해서는 별다른 진술을 찾을 수 없다.

1968년 1월에 검정 심사가 마무리된 제2차 교육과정에 따른 고등학교 지리 교과서는 1권이었던 이전 제1차 교육과정(교과서명 「인문지리」)에 비해 「지리 I」, 「지리 II」의 2권으로 늘어나게 되면서 우리나라 지역 지리 내용도 포함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두산 정상부의 귀속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언급을 찾기 어려우며, 정계비 등에 대한 언급도 일부 도서에 한정 된다. 직전 교육과정기까지 비교적 상세하게 관련 문제를 다루었던 노도양(1967)의 「(새로운)지리」에서도 내용 축소가 확연히 나타난다. 특이한 점은 참조한 교과서 4종 대부분이 ‘천지’에서 “암록강과 두만강이 발원한다.”는 식의 서술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³³⁾ 이전 교육과정기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과서에서도 이와 유사한 표현이 나타났지만, ‘백두산’에서 두만강이 발원한다는 취지가 대부분이었고 일부 교과서에서만 앞서와 동일한 진술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공간적 범위를 고려할 때, ‘백두산’이라는 거대한 화산체에서 두만강이 발원한다는 진술은 큰 무리가 없지만, ‘천지’에서 두만강이 직접 발원한다는 것은 해당 교과서 발행 오래전에 확인된 오개념이다. 이러한 진술은 당시의 교과서 저자들이 백두산 부근 국경 문제의 출발점에 대해 이해가 부족했거나 그다지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는 것으로도 파악될 수 있다. 문제는 이와 같은 교과서로 교육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현재도 오개념을 갖고 있다는 것이며, 아직까지도 일부 언론 등을 통해 재생산되고 있다.³⁴⁾

제2차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가 초등학교는 1970년대 초,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1970년대 중·후반까지 활용되었다. 이후 학교급 별로 교육과정 적용과 관련한 편차가 있지만 1980년대까지는 제3차 교육과정기와 제4차 교육과정기의 교과서들이 주로 사용되었으며, 일부 학교급의 경우는 제5차 교육과정도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이 교과서들의 백두산에 관한 내용 서술 경향은 앞서 제시한 교과서들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며, 양적으로는 오히려 줄어들었다고 볼 수도 있다.³⁵⁾ 이러한 경향은 중등교육의 경우 제7차 교육과정기까지도 지속되었으며,³⁶⁾ 2009 개정 교육과정에 이르러서야 간도 등 우리나라 영

역 문제와 관련한 내용이 한국지리 성취기준에 포함되면서, 백두산 정계비 등에 대한 내용이 적어도 고등학교에서는 상세하게 다루어지게 된다.

일제강점기에서 해방 이후로 이어지면서 백두산 천지를 비롯한 정상부에 대한 교육용 도서들의 내용 진술은 적어도 학생용 교과서 수준에서는 일관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즉, 일제강점기 교사용 참고 도서와 해방 이후 극히 일부 교과서에서, 정계비의 위치와 관련한 자세한 기술과 함께 백두산 정상부가 실질적으로 우리 영토가 아니라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지만³⁷⁾, 거의 모든 교과서는 천지의 삽화나 사진을 제시하면서 백두산 정상부가 조선 혹은 대한민국에 속한다는 사실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교과서로 배운 우리 국민들 대부분이 백두산 천지가 우리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우리나라에서 발행되는 지도들이 백두산 천지 전체를 우리 영토로 표현하는 것은 정말로 당연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V. 조·중 변계 조약과 백두산 부근 경계

1. 조·중 변계 조약의 내용과 영향

교과서를 통해 백두산 천지가 우리 것이라는 의식을 전달·확산해 왔음에도, 앞서 II장의 그림 6에서와 같이 백두산 부근 경계, 특히 천지 동쪽 경계는 여전히 혼란스럽다. 이와 같은 상황은 1960년대 북한과 중국 간에 체결된 조·중 변계 조약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조·중 변계조약은 당시 인도를 비롯한 인접 국가와의 영토 분쟁만으로도 외교적 곤란해 처해 있었던 중국과, 6.25전쟁 당시 북한을 패전으로부터 구해 준 중국에게 적극적으로 간도 지역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기 곤란했던 북한³⁸⁾ 사이에 큰 논란 없이 합의된 조약이라 할 수 있다(최장근, 2009:213-216). 조약은 1962년 10월 12일에 체결되었는데, 북한의 김일성과 중국의 주언라이(朱恩來: 주은래)가 서명을 하였으며, 모두 5조로 이루어졌다. 이 가운데, 백두산 부근 경계에 대한 내용은 1조에 포함되어 있다.³⁹⁾ 조·중 변계조약에 의한 백두산 부근 국경을 대략적으로 표현하면 그림 12와 같다.

조약에 포함된 백두산 부근 경계와 관련한 가장 큰 결정 사항은 바로 천지를 북한과 중국이 54.5%와 45.5%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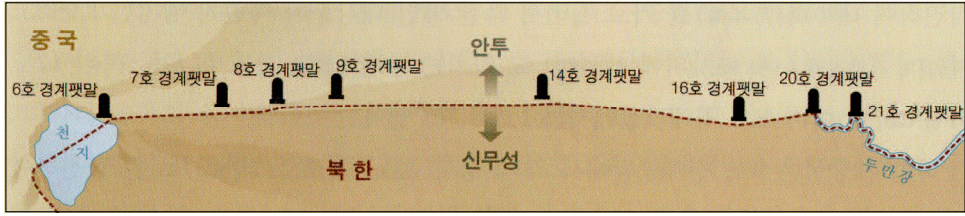


그림 12. 천지-두만강 최상류까지의 국경선

출처 : 이종석, 2010:103.



그림 13. 천지 주변 국경선

출처 : 노도양 · 박종욱, 1971:22.



그림 14. 천지 주변 국경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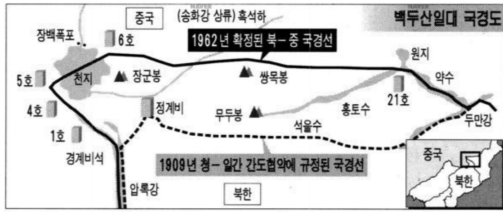
출처 : 이찬 등, 1984:20.

양분했다는 것이다(이종석, 2010:90). 1980년대 초의 경우, 실제 정확한 분할 비율이 알려지지 않았던 시기임에도 단지 천지 전체가 우리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는 것만으로 전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었으며, '6.25 참전 대가로 백두산 천지 할양 설이 일반화되었다.'⁴⁰⁾ 또한 비록 국회에서 채택되지는 않았지만 '백두산 영유권에 대한 결의안' 제출(1983년 9월 16일) 등으로 관련 문제가 정치적으로도 쟁점화 되었다(서길수, 2009:276-283). 즉, 천지가 우리 것이 틀림없다는 오랜 믿음과 배치되는 이와 같은 상황은 북한이 현행법상 반국가 단체이던 그렇지 않던 간에 적어도 교육용 도서에서는 절대로 수용될 수 없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백두산 정상부 국경에 대해 일반적인 사회 및 지리 교과서 진술과는 달리 유보적 입장⁴¹⁾을 취했던 그림 13과 같은 부도의 지도들도 70년대 말~80년대 초를 전후하여 변화하게 되는데, 천지 전체를 우리나라에 귀속된 것으로 표현하게 된다(그림 14).⁴²⁾

변계조약의 결과를 나타낸 그림 12에 따르면, 천지 주

위에 경계 표시와는 달리 6호 경계비 동쪽부터 두만강 상류까지 중국과의 경계선이 거의 직선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는 천지 동쪽의 경계가 우리나라 쪽으로 만곡하거나 아예 한참 아래쪽으로 내려와 있는 지도들(예를 들어, 그림 13, 14)에 비해, 국경선이 중국 쪽으로 옮겨진 것이다. 1990년대 이후에 조·중 변계 조약의 실제 내용이, 그리고 2000년에는 조약의 전문이 확인되면서, 간도 협약 때에 비해 우리 영토가 280km² 정도⁴³⁾ 더 넓어졌다고 알려지게 되었는데, 상당 부분이 천지 동쪽 지역의 경계 변화로 인한 것이다(그림 15). 그리고 이 변화는 우리 지도에도 조금씩 반영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림 2 지세도의 천지 동쪽 국경, 그림 4 북한 지도집 지도의 A, 그리고 그림 6의 오른쪽 지도가 대표적인 사례라고 판단된다. 결국, 부도의 일부 지도 중 앞서 2장에서 제시했던 그림 6의 오른쪽 지도와 같은 유형은 간도 문제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가장 유리한 측면으로 그려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자면, 현재 백두산 부근 경계와



“백두산지역 280km² 中서 양보”

그림 15. 북한-중국 경계선 변화 지도 및 기사 제목
출처 : 동아일보, 1999년 10월 21일자.

관련해서 교육용을 포함한 우리나라의 지도는 첫째, 천지 전체를 비롯한 백두산 정상부를 우리 영토로 표시하고 있으며,⁴⁴⁾ 둘째, 일부 지도의 경우는, 천지 동쪽 지역의 경계에 조·중 변계 조약 내용이 반영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타당성·적절성과 관계없이 앞으로도 국내 지도들의 백두산 부근 경계 표시에 변계 조약 내용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중국을 통해 백두산 천지를 여행하고, ‘천지의 중국 쪽’ 등의 표현을 일상에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하며, 언론 등에서 이에 대한 내용을 수시로 접하는 것처럼, 우리의 관점이나 인식에 조금씩 반영될 수 있다.

2. 조·중 변계 조약의 법적 의미와 과제

일반적으로 국제연합(UN)에 국가의 형식과 내용을 갖춘 정치적 조직이 가입하였다면, 그 조직은 국가로 인정된 것으로 본다. 왜냐하면 UN 헌장 제4조⁴⁵⁾에서 UN 가입 요건을 국가(state)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UN에 가입했다고 하여 어떤 국가가 모든 상대 국가들에게 국가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 것은 아니다. 국제법은 국내법과 달리 그 효력을 모두에게 강제할 수단과 방법이 취약하기 때문이다. 북한에 대해 우리 정부가 취하고 있는 입장이 바로 그러한 예외에 해당한다. 1991년 UN에 동시 가입한 우리와 북한은 서로를 국가로 승인하지 않고 있다(김영석, 2010:158-161).

북한 지역의 영토 및 국경 표시에 대한 문제가 접근하기 어려운 이유는 바로 북한을 국가로 볼 것인가의 여부에 대해 국제법과 우리 정부의 관점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는 우리나라 헌법 제3조⁴⁶⁾에도 확인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국가의 자격 요건에서 영토는 정부의 지배력이 주민들에게 미치는 범위라 할 수 있는데, 대한

민국 정부의 지배력은 현실적으로 북한 지역에 미치지 않는다. 그렇다면 왜 우리나라 헌법은 국제법에서도 요구하지 않는 영토의 구체적인 경계를 성문화하여 현실과 맞지 않는 상황을 유지하고 있는 것일까? 그 이유는 영토 관련 규정을 헌법에 성문화한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의 역사적 배경의 차이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세계 각국의 헌법에서 영토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는 각국의 역사에 따라 다른 서로 다른 유형을 보인다. 근대를 전후한 시기에 영토가 급격히 확장되었거나, 식민지의 독립으로 영토가 축소된 서구 열강들의 경우 대개 헌법에 영토와 관련한 조항들을 담지 않는다. 왜냐하면 향후 영토가 더욱 확장되거나 축소될 수 있는 가능성을 헌법을 통해 규율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아시아의 독립국가나 동유럽의 체제 전환 국가들은 자신의 영토를 명문화된 규정을 통해 보존하고 대외적 불가침·불가양의 성격을 명확히 하는 경향이 강하다. 우리나라 헌법 역시 이러한 유형의 국가들과 영토에 대한 헌법적 입장이 유사하다 할 수 있다. 중국의 경우 헌법 전문에서 “대만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신성한 영토의 일부분이다.”라고 하여 사실상 우리나라가 북한 지역에 대해 취하고 있는 헌법적 영토 인식과 같은 태도를 보이고 있다(김승대, 2009:118-124)

즉, 우리 정부는 한반도 전체를 우리의 영토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분단 이후 북한이 취한 행정적 조치와 그에 따른 영토의 변경을 인정할 수가 없는 입장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국가로 승인하지 않는 북한이 제3국과 맺은 국제법의 경우는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 본 연구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조·중 변계조약이 바로 이러한 문제 사례에 해당한다. 1962년 체결된 조·중 변계조약이 과연 국제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조약인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다. 중국과 북한 모두 이 조약을 비공개적으로 체결하였고, 체결 후 UN에 등록하지도 않았으며 현재까지도 그 내용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불건전한 정치적 담합의 산물임을 방증하고 있다(최장근, 2009:213-216).

이와는 달리 영토 문제와 관련한 그간의 국제사법재판소(ICJ)의 판례를 보면 “현재의 평온 상태를 깨뜨리지 말라”는 보수적 결론이 강조되고 있다. 즉, 대한민국이 1948년 합법적인 정부 수립 이후부터 1992년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와의 외교 관계 수립⁴⁷⁾, 그리고 그 이후에도 백두산을 포함한 간도 지역에 대해 별다른 영토적 주장

을 제기하지 않은 점에 대하여 중국의 영토 주권을 묵시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이근관, 2010:138-141).

이상의 논의를 통해 북한 지역의 영토 문제는 지리적·역사적 뿐만 아니라 국제법적으로 복합적이고, 다차원적인 이해관계가 얽힌 문제라는 점을 확인하였다. 부연하자면, 북한을 국가로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에서부터 우리나라와 국제 사회의 입장이 서로 엇박이었고, 구체적인 조약의 실효성 유무에 대해 국제법과 국제사법재판소의 판례가 일관되지 않는다는 문제로 한 번 더 얽혀 있다. 또한, 이처럼 복잡한 문제를 지도나 교과서에서 다루는 것은 '어론'이나 '교육'이라는 또 다른 차원에서의 논의를 거쳐야 한다. 그러므로 분단이라는 현실적 상황에 당면해 있으면서도 한반도 전체를 우리 영토로 간주해야 하는 상황이, 현실 인식과 당위 사이의 간극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연구의 대상 지역인 백두산 부근의 지도상 국경선 표시 문제는 우리가 중국과 직접적 대치를 하고 있지 않은 현재는 물론, 통일 후에도 자칫 영토 관련 외교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 따라서, 교과용 도서를 포함한 국가 발행 지도가 우리의 영토 주권을 제대로 표현하고 있는지, 반대로 불필요하게 다른 나라를 자극하는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해 항상 관심을 가지는 것은 기본적인 자세라고 생각한다. 나아가, 논의 전개 과정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던듯이,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백두산 부근 경계 표시는 지리적인 관점뿐 아니라 역사적, 일반사회적(특히, 국제법과 국제 정치)인 관점에서도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스크프(scope)가 넓은 학습 주제라고 판단된다. 경계 표시의 지도상 정확성 논의와 함께 필요할 경우 학제적·융합적 접근이 적용가능한지에 대한 교육적 검토를 제안하며, 이를 통해 '국가 경계', '영토 문제'라는 부담스러운 주제를 학교 교육에서도 유연하게 포용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VI. 맺음말

국경과 같은 경계선은 지상에 있다고 인간에 의해 가정된 선이며, 자연적 세계에서는 대응물을 갖고 있지 않

다. 이는 지도라는 텍스트에 그려지고 난 이후 공인을 통해 '현실 속에 존재할 자격을 얻는다(정선태 역, 2006:251). 달리 말하자면, 지도에 표시된 국경선을 통해 영토 범위를 받아들이는 상황, 즉, 현실이 지도를 따라가며 국가가 지도를 통해 구체적인 영토를 만들어내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지도 제작은 국가나 국민의 정체성 형성에 많은 기여를 하며, 지리 교육은 이데올로기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설혜심, 2007:32). 그러므로, 영토 교육에 있어 동아시아 각국의 과도한 민족주의, 국가주의 등과 관련된 우려가 나오는 시점에서, 영토 경계의 지도 표시에 다양한 버전이 존재한다는 것은 분명히 우려되는 점이 있다.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 '북한'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예기치 않은 다른 문제가 촉발될 수 있다는 것도 우리는 충분히 경험해 왔으며, 현재도 진행 중이라고 할 수 있다.

백두산 부근의 경계 획정 문제는 1712년 처음 가시화된 이후 300여 년이 넘도록 진행 중이며, 지도상으로도 조금씩 다른 몇 가지 버전이 존재한다. 학생용 교과서의 천지 삽화나 사진 등을 통해 국민 모두 천지 전체가 우리 것이라는 의식을 형성시켜왔다는 점은 분명하지만, 천지 동쪽 경계, 비룡폭포(장백폭포)의 포함 여부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정리가 필요하다. 특히 천지 동쪽 경계의 경우는 북한과 중국이 맺은 조·중 변계 조약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며, 이는 '북한'에 대한 법령적, 교육적 차원의 해석 및 정의와도 궤를 같이 할 수밖에 없다. 부연하자면, 일부 지도의 경우는 조·중 변계 조약 중 우리에게 유리한 내용을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국가 경계와 관련해서는 '공인'된 명확한 정리나 지침을 지속적으로 모색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이와 함께 기존과는 다른 관점에서 질문을 던져보고,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시해 왔거나 아니면 애써 외면하던 현실들과 직면해보는 과정을 경험하는 것도 교육적 관점에서는 의미를 갖는다. 이런 맥락에서 백두산 부근 경계와 관련해서 서로 다른 시각·주장들을 검토하고 분석해보는 학습 내용을 학교 현장에 제시하는 것도 시도해볼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다양한 담론들의 지층 위에 이를 묶어낸 명확한 주장이 자리매김 될 때, 국내는 물론 대외적으로도 단단한 논리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다.

註

- 1) ‘센카쿠’, ‘시사’, ‘난사’, ‘쿠릴’은 실효지배국 여부 또는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표제어 중 뜻풀이 제시 여부를 고려하여 표기하였다.
- 2) 한국지리학회지의 경우 서태열(2012), 이두현·박희두(2014), 이상균 등(2017) 등의 연구들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 3) 분쟁·갈등 당사국 및 제3국의 교과용 도서에서 경계 지역 지명을 표기하는 방식에는 ‘영토’ 관련 분쟁이나 갈등 상황을 바라보는 해당 국가의 의도나 시선이 담겨있다고 볼 수 있으며, 분쟁·갈등 수위를 변화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 4) 대표적인 사례로 교과용 도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각종 지도류는 일제강점기에서 해방된 직후에 사용하는 행정 구역 및 지명을 사용하고 있다. 이에 반해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있는 대한민국 전도 등의 지도는 북한 지역에 대해 북한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행정 구역을 적용하고 있다.
- 5) 두 지도를 포함한 그림 4, 그림 5, 그림 7, 그림 13, 그림 14의 축적은 연구진이 삽입한 것이며, 본 연구에 포함된 지도들은 필요시 편집 과정에서 이미지 크기를 조정하여 제시하였다.
- 6) 강석화(1995), 이일걸(2009; 2017), 장계황·이범관(2012)의 논문과 서길수(2009), 김정배 등(2010), 이종석(2014)이 출간한 도서에서 백두산 정계비와 간도 문제 관련 주요 선행 연구 및 그 동향을 확인할 수 있다.
- 7) 압록강, 두만강, 송화강 등 이 지역 하천의 하계망을 고려하면, 백두산 정계비를 근거로 간도가 우리 영토라는 사실을 주장할 경우, 적어도 현재의 지리 정보상으로는 백두산 천지가 우리 영토에 속하지 않게 된다는 사실은 거의 언급되지 않고 있다.
- 8) 해당 내용은 다음과 같다.
 목극등이 정계비를 세운 후 조선으로 하여금 목적으로 연결하도록 한 하천은 黑石溝(土門河)一五道白河一松花江一黑龍江一아무르강이 되어 바다로 들어간다. 이를 따라가면 목극등의 관찰지인 ‘烏喇’ 역시 조선의 영토가 된다. 이 때문에 정계비의 ‘토문’을 송화강의 지류로 보면서 그 우안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그러할 경우 백두산 정상부와

- 천지는 조선의 영토에서 제외된다. (이강원, 2007:99의 각주 16)
- 정계비는 세워진 직후인 5월 16일부터 논란이 되었다. 茂山에서 대기하고 있던 조선측 집반사 일행은 목극등이 정한 토문강(두만강)의 源流가 大紅丹水나 石乙水를 가리키는 것으로 알고 그보다 위에 있는 紅土水가 원류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압록강과 두만강의 수계를 경계로 한다는 전제 하에서는, 홍토수가 두만강의 원류라고 하여도 백두산 정상부와 천지는 조선의 영토가 되지 않는다. (이강원, 2007:102)
- 9) 압록강과 두만강의 수면을 중국과 북한이 공유하는 상황, 조약 체결에 있어서 중국 측 주요 담당자 및 그 역할 등 추후 상세하게 밝혀진 조·중 변계조약 관련 내용의 일부를 비교적 상세하게 제시하고 있다.
 - 10) 저자인 박래겸이 1827년 7월 14일 북평사 관직이 내려진 뒤부터 1828년 4월 2일 도성의 자택에 당도할 때까지의 기록을 담은 일기이다(네이버 책, “북막일기,” 2017년 7월 6일 검색).
 - 11) 이와 같은 입장은 본문에서 제시한 문헌 이외의 연구 문헌에서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현조(2007)는 “백두산 정계비에 의해 조선과 청의 북방 경계가 압록강-백두산 정계비-토문강 선으로 확정되어 백두산 천지를 비롯한 압록강 북쪽의 서간도는 청의 영토가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이현조, 2007:190), 노영돈(2004)은 “...정계비를 유효하게 보는 경우에는 양국간의 국경은 압록강-백두산 정계비-토문-석퇴-(송화강 지류인)토문강 선으로 확정된 것이고...”라고 기술하고 있다(노영돈, 2004:10).
 - 12) 간도 협약에서 중국과의 경계 설정의 핵심적인 조항은 제1조로 해당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청 양국 정부는 도문강을 청국과 한국의 국경으로 하고 강 원천지에 있는 정계비를 기점으로 하여 석을수를 두 나라의 경계로 함을 성명한다(日·清兩國政府는 圖們江을 淸、韓兩國의 國境으로 하고 江源地方에 在하는 定界碑를 起點으로 하여 石乙水로써 兩國의 境界로 함을 聲明함. (순종실록 3권, 순종 2년 9월 4일 양력 1번째 기사, 1909년 대한 융희(隆熙) 3년)
 - 13) 일제강점기는 초등 교과서와 초등 교사용 지도서를 중심으로 하였으며, 해방 이후는 교육과정상 북한 지지(地誌)를 다루고 있는 학교급의 교과서

를 대상으로 하였다. 참고로, 다른 장(주로 II장과 V장)에서 분석 또는 참조한 부도의 경우는 천지 할양설이 대대적으로 알려지고 일반화되기 시작한 1970년대 말~1980년대 초와 2000년대 이후의 것을 주요 대상으로 하였다.

- 14) 본 연구의 본문 전체와 참고 문헌에서 교과서 연도는 검정연도나 초판 발행연도가 아닌 해당 교과서의 발행연도를 기준으로 제시하였다. 이는 교과서들이 검정 시점 이후 장기간 사용되며, 사용 기간 중 조금씩 수정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부연하자면, 제1차와 제2차 교육과정 기간의 고등학교 교과서는 각각 10년 이상 사용되었다.
- 15) 본 연구에서 인용 또는 분석한 일제강점기 교과서 및 교육용 참고 도서의 저자와 도서명은 일본에서 발행되었거나 (대표)저자가 일본인인 경우는 한글 병기 없이 원래의 표기대로, 조선총독부가 발행한 것은 한글로 표기하였다.
- 16) 일제강점기의 중등교육기관이다. 1911년 공포된 조선교육령에 따르면, 입학자격은 12세 이상으로 4년제 보통학교 졸업자나 그와 동등한 자격소지자이다. 수업연한은 4년(여자고등보통학교는 3년)이었다. 수업연한은 1922년 개정 조선교육령으로 인해 5년(여고보는 4년)으로 늘어나게 된다 (네이버 두산백과, “고등보통학교,” 2017년 7월 6일 검색).
- 17) 이와 거의 유사한 백두산에 대한 서술 방식과 내용을 한 해 전인 1913년에 文部省이 편찬한 교사용 참고 도서인 「小學日本地理教授資料報告」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文部省, 1913:590). 「小學日本地理教授資料報告」는 국권 피탈 직후에 수정된 것으로, 기본적으로 각 지방의 사범학교, 식민 통치 기관(예를 들어, 조선총독부, 대만총독부, 관동도독부, 사할린청 등)으로부터 조사·수집된 지리 교육에 활용 가능한 자료들로 구성되어 있다(文部省, 1913:1).
- 18) 해당 교과서에는 ‘관동주 및 남만주’라는 별도의 단원이 있지만, 기술된 내용상 일제의 랴오둥 반도 남부 조차와 남만주 철도 노선 및 그 부속지의 영유로 인해 하나의 단원을 구성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당시까지는 만주에 대해 ‘영토’나 ‘○○지방’과 개념을 적용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상황도 교과서 표현이나 기술에

어느 정도는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로 해당 교과서는 총 19개의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 조선지방에는 5개의 단원이 배정되어 있으며, ‘관동주 및 남만주’ 단원 이외의 지역 단원은 ‘○○지방’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 19) 文部省이 편찬한 「兒童用尋常小學地理書」로 卷一은 1918년, 卷二는 1919년에 발행되었다.
- 20) 「新定尋常小學地理教授書」의 卷一부터 卷二의 앞부분까지는 현재의 일본 지역을 다루고 있으며, 권2의 나머지에 당시 일본의 식민지에 해당하는 지역과 세계지리를 다루고 있다.
- 21) 조선총독부가 1920년에 편찬한 「심상소학지리서보충교재: 아동용」이다.
- 22) 표기 명칭은 ‘龍王潭(용왕담)’이다.
- 23) 해당 도서에서는 5산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북악-백두산 / 남악-지리산 / 서악-묘향산 / 동악-금강산 / 중악-삼각산
- 24) 조선총독부가 1923년에 편찬한 학생용 교과서이다.
- 25) 이외에도 백두산 정상부의 분화구에 있는 호수 이름이 천지 또는 용왕담이라고 불린다는 점과 ‘백두’라는 이름이 화산재의 색깔에서 비롯되었다는 점 등 이전의 교사용 참고 도서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내용도 함께 기술하고 있다(鈴木駿太郎, 1935:26). 이와는 달리 小川英男이 1934년에 저술한 「(朝鮮總督府)初等地理書(卷一)解説」의 경우는 백두산 정상부의 귀속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술이 없으며, 백두산이 국경에 있다는 점과 주변 강들의 분수령을 이룬다는 점 등에 대해서는 이전의 교과용 도서와 큰 차이가 없다. 다만, ‘龍王潭(天池)’와 같은 식으로 ‘天池’라는 지명을 병기하고 있으며, 화산재의 형태, 지질, 구성 암석과 관련한 특징을 비교적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다는 점(小川英男, 1934:17)은 鈴木駿太郎의 도서와 유사하다.
- 26)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초등지리(권1)」은 1942년, 「초등지리(권2)」는 1943년 개정판까지 확인할 수 있다.
- 27) 백두산에 대한 동일한 서술을 1954년 문교부에서 발행한 초등 교과서인 「우리 나라의 생활(사회생활) 4-1」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문교부, 1954:17-20). 참고로 두 책은 동일한 교육과정기(교수요목기)에 발간된 교과서이다.

- 28) 두만강이 ‘대체로’ 관북지방과 중국과의 국경을 이루고 있다고 서술하고 있다(노도양, 1949:18).
- 29) 이기석의 연구(2014)에서 사용된 용어를 기준으로 하였다.
- 30) ‘설문’은 단원 마무리에 제시되는 평가 문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백두산 지역과 관련한 구체적인 질문은 다음과 같다. “15)이 지방은 역사적으로 어떠한 변천이 있었으며 여진족은 무슨 까닭으로 이 지방에 자주 침입하였는가? 18)백두산은 어떠한 산이며 우리들은 어떠한 느낌과 감화를 받게 되는가? 19)정계비는 어느 때 설치한 것이며 국경 문제가 간도 지방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정갑, 1949:84; 1950:84).
- 31) 1972년은 초등학교에 제2차 교육과정 교과서가 적용된 마지막해이다.
- 32) 예를 들어, 법문사에서 개발한 김정성 등(1966)의 교과서는 일반적으로 많이 실리는 천지 사진과 함께 ‘대정봉 마루턱에서 내려다 본 개마고원(연구자 주: 정계비 터의 위치가 표시되어 있음)’이라는 제목의 사진을 실고 있다. 이를 제외하면 기존과 차별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없으며, 일본식 명칭인 대정봉과 병사봉으로 백두산 최고봉 명칭이 혼용되고 있는 것도 아쉬운 점이다(김정성 등, 1966:79-80). 동아출판사 최홍준 등(1966), 영지문화사 이찬 등(1973)의 경우는 분량이나 내용 요소 면에서 김정성 등(1966)의 교과서와 유사하거나 오히려 더 적은 편이며, 1972년 사조사가 발행한 교과서는 이전 교육과정기에서 다른 저자들에게 비해 백두산 국경 문제를 비교적 자세하게 다루었던 노도양이 참여하고 있지만 전술한 교과서들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 33) 해당 표현은 다음과 같다. “이 호수는 압록강·두만강과 송화 강(松花江)의 수원이 된다(최홍준, 1968:231).” / “~산꼭대기에는 천지(天池)라는 화구호(火口湖)가 있어, 압록강과 두만강의 근원이 된다(노도양, 1967:252).” / “천지는~백두산정의 화구호로서 압록강 두만강 및 만주의 송화 강(松花江)이 여기서 발원한다(이한순·서찬기, 1967:263).” / “산정에는 둘레 12km의 카르데라 호인 천지가 있고 압록강과 두만강은 각각 여기서 갈라져 흐르게 된다(신동욱 등, 1972:210).”
- 34)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언론사의 기사 내용을 인터넷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장백폭포를 거쳐 압록강, 두만강으로 이어지며 생명의 젖줄이 되는 눈 녹은 천지의 장관이 공개됐습니다.”(SBS NEWS, 2017월 6월 19일자) / “백두산 천지는 압록강, 두만강, 송화강이 발원하는 삼강지원(三江之源)이다.”(신동아, 2017년 5월 12일자) / “백두산 천지의 물이 갈라져 압록강으로 가면 서해로 가고 두만강으로 가면 동해로 가게 되는 것을 본다.”(서울경제, 2016년 1월 29일자).
- 35) 다만, 국정교과서였던 제3차와 제4차 교육과정기 중학교 사회 교과서에서 ‘간도’에 대한 기술이 보이는 것은 특이하다. 참고로 두 교육과정기 교과서의 해당 진술은 거의 동일한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제3차 교육과정기 : 「사회1(상)」(문교부, 1981:84) / 제4차 교육과정기 : 「사회1」(문교부, 1987:126-127).
- 36) 주로, 북한 지지 단원이나 화산 지형을 다룰 때 등장하는 정도였다.
- 37) 이 경우에도 백두산 정상부에만 해당하지 백두산 전체가 우리 영토가 아니라는 의미는 아니다.
- 38) 북한은 백두산에 대해서는 우리 영토라는 인식을 강하게 갖고 있었으며, 천지가 중국에 귀속된 상황도 인정하지 않았다고 한다(이종석, 2010:93; 2014:20-21).
- 39) 1조는 두 나라의 국경 설정, 2조는 국경선 강안의 섬과 사주의 귀속국가 확정에 대한 규정, 3조는 압록강과 두만강, 압록강 어귀 및 바깥쪽 바다에 대한 경계 설정 원칙, 4조는 경계 뜻말 설치, 지도 작성 등 후속 조치, 5조는 이전 두 나라의 국경 관련 조약의 무효화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서길수, 2009:197-200). 이외에도 전반적인 조약 체결 과정, 조약 원문, 후속 조치 등은 서길수(2009)의 저서에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 40) 백두산 천지 할양설이 대대적으로 알려지고 전 국민의 관심 속에 일반화된 것은 1980년대 초이지만, 관련 내용의 가능성이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 후반부터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동아일보는 1967년에 탈북 기자 이수근(1969년 위장 간첩 혐의로 사형됨.)과의 대담 기사에서 “~수년 전 국경조약에 의해 백두산 천지의 일부가 중공 측에 넘어갔다는 예기를 들었다.”는 이수근의 답변을 실고 있다(동아일보, 1967년 4월

1일자).

- 41) 1980년대 이전의 교과서와 부도 간에 나타나는 백두산 부근 경계 표시의 불일치 현상과 관련 지도의 변화 등에 대해서는 별도 후속 연구를 통해 상세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
- 42) 이전과 달리 천지 전체가 우리에게 속한 것으로 표시된 교육용 지도를 1980년을 전후로 간행된 일부 사회과 부도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구진이 참조한 이 시기 부도 중에서는 제3차 교육과정용으로 1979년에 문교부가 저작한 「사회과 부도」에서 그림 13과 같은 유형의 지도가 처음으로 등장하였다. 부연하자면, 부도의 경우 IV장에서 논의한 일반적인 학생용 교과서와는 차별적으로, 이 시기 이전까지 오랜 기간 동안 백두산 부근(특히 우리나라의 천지 귀속 여부)에 대한 표시 및 표현이 명확하지 않은 것이 많았다. 2000년대 이후 부도에 포함된 백두산 부근 상세 지도의 특징에 관해서는 II장에서 제시한 그림 V와 본 장의 서술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43) 280km²는 서울특별시 면적의 절반에 약간 못 미치는 수준이다(경향신문, 1999년 10월 21일자).
- 44) 단, 비룡폭포(장백폭포)의 포함 여부에 대해서는 그림 6과 마찬가지로 서로 다른 버전이 존재한다.
- 45) Article 4 - 1. Membership in the United Nations is open to all other peace-loving states which accept the obligations contained in the present Charter and, in the judgment of the Organization, are able and willing to carry out these obligations. / 2. The admission of any such state to membership in the United Nations will be effected by a decision of the General Assembly upon the recommendation of the Security Council(국가법령정보센터, “국제연합헌장 및 국제사법재판소규정,” 2017년 7월 6일 검색).
- 46) 대한민국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헌법,” 2017년 7월 6일 검색).
- 47) 1992년 8월 수교시 공동성명을 통해 ‘영토보전의 상호 존중’을 천명한 바 있다. 이는 우리나라가 현재의 중국 국경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이종석, 2014:59).

참고문헌

<논문 및 단행본>

- 강석화, 1995, “1712년 朝·淸 定界와 18세기 朝鮮의 北方 經營,” 진단학보, 79, 135-165.
- 강석화, 1997, “白頭山 定界碑와 間島,” 한국사연구, 96, 121-134.
- 김명기, 2011, “통일 후 한중국경문제와 조중국경조약의 처리문제,” 법제처 편, 「(2011년)남북법제 연구보고서」, 서울: 법제처 법제지원단, 87-123.
- 김승대, 2009, “우리 헌법과 한반도 영토·국경 문제”, 부산대학교 법학연구, 50(2), 117-147.
- 김영석, 2010, 「국제법」, 서울: 박영사.
- 김정배·구난희·조법중·강석화·이종석·이서행·도성재·윤성효·현영남·정치영·이상훈·장원석·김병선, 2010, 「백두산: 현재와 미래를 말한다」, 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 노영돈, 2004, “청-일 간도협약의 무효와 한국의 간도영유권,” 국사편찬위원회 편집부, 「한국사론 41: 한국 근대의 북방영토와 국경문제」, 과천: 국사편찬위원회, 3-33.
- 서길수, 2009, 「백두산 국경 연구」, 서울: 여유당출판사.
- 서태열, 2012, “해방이후부터 1950년대까지 중등 지리 교과서에서의 독도 및 동해 교육,” 한국지리학회지, 1(1), 1-9.
- 설혜심, 2007, 「지도 만드는 사람: 근대 초 영국의 국토·역사·정체성」, 서울: 길.
- 이강원, 2007, “조선후기 국경인식에 있어서 豆滿江·土門江·分界江 개념과 그에 대한 검토,” 정신문화연구, 30(3), 91-118.
- 이근관, 2010, “통일 후 한-중 국경 문제에 관한 국제법적 고찰,” 국제법학회논총, 55(4), 117-144.
- 이기석, 2014, “혼돈기의 지리학자 정 갑(鄭甲, 1904~1988) 교수의 생애와 활동,” 지리교육논집, 58, 47-73.
- 이두현·박희두, 2014, “정부 기관 기술 중심의 독도 기호 내용 분석,” 한국지리학회지, 3(2), 97-110.
- 이상균·최희·윤 티 탄 프영·김종근, 2017, “베트남의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와 영토교육,” 한국지리학회지, 6(1), 1-13.
- 이일걸, 2009, “間島協約 締結 100년의 回顧와 展望,” 백산

학보, 85, 203-267.
 이일걸, 2016, “白頭山定界碑 設置의 숨겨진 實相,” 백산학보, 105, 107-152.
 이종석, 2010, “1960년대 북한-중국 간 백두산 국경 획정 과정,” 김정배·구난희·조법중·강석화·이종석·이서행·도성재·윤성효·현영남·정치영·이상훈·장원석·김병선, 「백두산: 현재와 미래를 말한다」, 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89-107.
 이종석, 2014, 「(세종정책연구2014-4)북한-중국 국경 획정에 관한 연구: 경위, 내용, 특징, 평가」, 성남: 세종연구소.
 이현조, 2007, “조중국경조약체제에 관한 국제법적 고찰,” 국제법학회논총, 52(3), 177-202.
 이형석, 1991, “(20주년 기념 압록강 문화유적 답사 보고) 백두산 정계비와 천지 분할,” 북한, 239, 86-95.
 장계환·이법관, 2012, “간도에 관한 선행 연구의 특성 연구,” 대한부동산학회지, 30(1), 229-253.
 정선태 역, 2006, 「지도의 상상력」, 서울: 산치림.
 최장근, 2009, “통일한국에 있어서 조중변계조약의 위상: 정치성과 법적 지위에 관한 분석,” 동북아문화연구, 20, 211-225.

<교과서 및 교사용 참고 도서>

강대현·주재중, 1963, 「우리 나라 지리」, 서울: 흥지사.
 김경성·변태섭·문홍주·이정환·최재희·한태연, 1966, 「사회 I」, 서울: 법문사.
 노도양, 1949, 「우리 나라(지리 부분)」, 서울: 탐구당.
 노도양, 1957, 「우리 나라 지리」, 서울: 탐구당.
 노도양, 1967, 「(새로운)지리 I」, 서울: 사조사.
 노도양·박종욱, 1971, 「새로운 사회과 부도」, 서울: 사조사.
 노도양·이종항·권혁소·최병철·황철수·오배근·최정희, 1972, 「(새로운)사회1」, 서울: 사조사.
 문교부, 1948, 「(사회생활과 4학년 소용)우리나라의 생활(1)」.
 문교부, 1954, 「우리 나라의 생활(사회생활) 4-1」.
 문교부, 1972, 「사회 4-2」.
 문교부, 1979, 「사회과 부도」, 서울: 국정교과서.
 문교부, 1981, 「사회1(상)」, 서울: 국정교과서.
 문교부, 1987, 「사회1」, 서울: 대한교과서.
 박노식, 1961, 「우리 나라 지리」, 서울: 동국문화사.
 박선미·강대균·승현아·서정현·박한복·정환택·안동립, 2010, 「사회과 부도」, 서울: 동아지도.

신동욱·정홍현·이정원·지태기, 1972, 「표준지리 I」, 서울: 문리사.
 안송산·박관섭, 1957, 「우리 나라 지리」, 서울: 서울출판사.
 이지호, 1960, 「한국지리」, 서울: 을유문화사.
 이찬·강대현·황재기·류우익·이원순·나종일·윤세철·김현각, 1984, 「사회과 부도」, 서울: 교학사.
 이찬·조좌호·김중환·최문환, 1973, 「중학사회1」, 서울: 영지문화사.
 이한순·서찬기, 1967, 「지리 I」, 서울: 일한도서출판사.
 정갑, 1949, 「우리 나라 생활」, 서울: 을유문화사.
 정갑, 1950, 「우리 나라 생활」, 서울: 을유문화사.
 조선총독부, 1914, 「일본지리교과서」, 총무국인쇄소.
 조선총독부, 1920a, 「심상소학지리서보충교재: 아동용」.
 조선총독부, 1920b, 「심상소학지리서보충교재교수참고서」.
 조선총독부, 1923a, 「보통학교지리보충교재: 아동용」.
 조선총독부, 1923b, 「보통학교지리보충교재교수참고서」.
 조선총독부, 1932, 「초등지리서(권1)」.
 조선총독부, 1933, 「초등지리서(권2)」.
 조선총독부, 1937, 「초등지리(권1)」.
 조선총독부, 1938, 「교사용 초등지리(권1)」.
 조선총독부, 1942, 「초등지리(권1)」.
 조선총독부, 1943, 「초등지리(권2)」.
 조선총독부, 1944a, 「초등지리 제오학년」.
 조선총독부, 1944b, 「초등지리 제육학년」.
 최성길·조창연·최원희·황병원·심은희·추정명·추해권, 2011, 「지리 부도」, 서울: 지우사.
 최홍준, 1968, 「지리 I」, 서울: 동아출판사.
 최홍준·이홍직·민영규·김성식·김기석·박일경·김준보·서석순·한기언, 1966, 「중학사회1」, 서울: 동아출판사.
 國定教科書共同販賣所, 1919, 「新定尋常小學地理教授書(卷二)」.
 大石運平, 1935, 「(初等地理書)挿畫取扱の實際」, 朝鮮公民教育會.
 文部省, 1913, 「小學日本地理教授資料報告」, 國定教科書共同販賣所.
 文部省, 1918, 「兒童用 尋常小學地理書(卷一)」.
 文部省, 1919, 「兒童用 尋常小學地理書(卷二)」.
 小川英男, 1934, 「(朝鮮總督府)初等地理書(卷一)解説」, 古今書院.
 鈴木駿太郎, 1935, 「初等地理書附圖解説(上卷)」, 二水閣出版部.

<지도>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2013, 「북한지도집」.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2017, “대한민국전도”(1:1,200,000).
 국토해양부 국토지리정보원, 2013, 「대한민국 지세도」
 (1:250,000).
 National Geographic Information Institute, 2009, *The National Atlas of KOREA*.
 National Geographic Society, 2015, *National Geographic Atlas of the World (10th edition)*.

<기타>

순종실록 3권, 1909.
 경향신문, 1999년 10월 21일자, “백두산 일대 280km² 우
 리 땅 편입 62년 北·中 邊界조약 국경선 첫 확인.”
 동아일보, 1967년 4월 1일자, “북한 동포는 헐벗고 굶주리
 고 사슬에 매여.”
 동아일보, 1999년 10월 21일자, “백두산 지역 280km² 中
 서 양보.”
 서울경제, 2016년 1월 29일자, “[마음코칭] 속도와 방향.”
 신동아, 2017년 5월 12일자, “[한 글자로 본 중국-지린성]
 고구려의 기상 청나라의 위력 만주국의 침탈 조선족
 의 혼돈.”
 SBS NEWS, 2017년 6월 19일자, “눈 녹은 천지…압록강·
 두만강으로 흐르는 ‘생명의 젓줄’.”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국제연합헌장
 및 국제사법재판소규정(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and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2017년 7월 6일 검색)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대한민국헌법,
 2017년 7월 6일 검색)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tdweb2.korean.go.kr>

네이버 두산백과,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061417&cid=40942&categoryId=33384>(고등보통
 학교, 2017년 7월 6일 검색)
 네이버 책, http://book.naver.com/bookdb/book_detail.nhn?bid=10244731(「북막일기」, 2017년 7월 6일
 검색)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EC%A0%A0%EB%8B%A4%EC%98%A4_%EC%84%B1
 (젠다오 성, 2017년 8월 14일 검색), https://ko.wikipedia.org/wiki/%EC%98%8C%EB%B3%9C_%EC%A1%B0%EC%84%A0%EC%A1%B1_%EC%9E%90%EC%B9%98%EC%A3%BC(엔벤 조선
 족 자치주, 2017년 8월 14일 검색)
 인터넷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
 (천지, 2017년 7월 6일 검색; 간도, 2017년 8월 14일
 검색)

교신 : 안종욱,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21-15 정
 동빌딩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이메일: ahncu@
 kice.re.kr)

Correspondence : Chong Uk Ahn, 04518, Jeongdong
 Building, 21-15 Jeongdong-gil, Jung-gu, Seoul
 Korea, Korea Institute for Curriculum and Eval-
 uation (Email: ahncu@kice.re.kr)

투 고 일: 2017년 7월 16일
 심사완료일: 2017년 8월 10일
 투고확정일: 2017년 8월 16일